



『PPP』??



[Polluters Pay Principle!!]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] 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~!!

환경정책 기본법 제7조/ 해양환경보전법 제8조(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)

※ PPP원칙에 따른 방제비용 부과징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비용 산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~!

방제비용 부과·징수 집행강화를 위한 지원계획 알림~!

[세부추진 1] 방제비용 소송 가이드 마련 및 법률 전문가 교육 (~6월)

- (소송절차) 소송진행 단계별 조치사항 등 소송 절차 마련
- (전문교육)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소송, 행정소송 등 전문가교육

[세부추진 2] 방제비용 부과·징수 사례집 제작! (~9월)

- (수록내용) 대형사고(H/S, 오토배너호, 홍타이호 등) 방제비용 쟁점, 방제비용 소송 대응 및 관계법령 자문 결과 등

[세부추진 3] 방제비용 연구모임(학습조직) 운영~!! (~10월)

- (주요내용) 방제비용 체계 및 합리적 방제비용 산출방안, 「방제비용 부과·징수 규칙」 운용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

『IPCC』 ~!!!



▶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vulnerability

기후 변화가 인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**과학적, 기술적 평가를 제공**하고 그에 따른 **국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**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정부간 협의체 입니다~!! 우리나라는 외교부가 대표단으로 정기총회에 참석하고 있지요~

과학적 보고서 작성을 통해 **정책 결정자에게 필요한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**하도록 노력한답니다~!

해양경찰청 「블루카본」 보호 예방 추진계획~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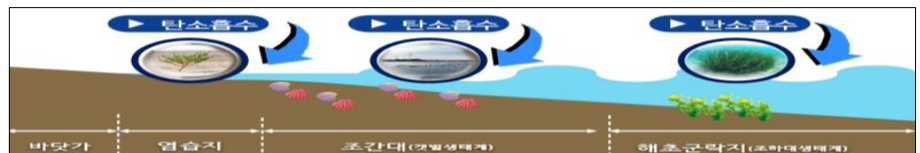


▶ 3개 분야[①예방활동, ②관리강화, ③거버넌스 구축], 20개 세부 추진과제 수립

[예방활동]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로부터 갯벌 등 블루카본 보호를 위한 오염물질 불법배출 점검 단속 등 예방활동 확대~!

[관리강화] 갯벌, 습지 등 블루카본에 서식하고 있는 해양생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오염피해 예방 등 선제적 대응 및 지속적 관리~!

[거버넌스] 정부, 지자체, 시민사회와 블루카본 보호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·확대하여 기후변화 대응 노력~!!



IMO PPR, NPCGF

▶ IMO Pollution Prevention Response(IMO 해양오염방지 대응 전문위원회)

▶ North Pacific Coast Guard Forum(북태평양해양치안기관 회의)-한,중,일,러,미,캐 참석

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대규모 해양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! 이에 해양에서의 국제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요~!! (One Ocean One Vision)

방제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회의 (IMO, NPCGF) 참석~!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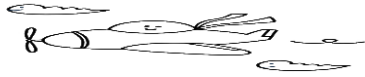
▶ 제9차 IMO PPR : '22. 4. 4.~4. 8. (5일간)

[주요논의] ① **HNS 유출 대응을 위한 지침서 개발 시작** / ② 북극해에서 선박 중유사용 및 운반 금지('24.7월) 및 북극해 당사국 금지 유예(5년간)를 위한 지침서 개발 진행 / ③ 선박기인 해양플라스틱 규제 강화를 위한 **선박 폐기물 기록부 대상을 총톤수 400톤에서 100톤으로 변경** 등~!!

▶ 제22차 NPCGF 전문가회의의 위기대응그룹 회의 진행

[주요논의] ①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시 **피난항 규정(Place of Refuge)에 따른 도상훈련 제안** / ② 친환경연료에 의한 사고 대비대응 방안 및 협력강화 / ③ 신기술 활용 대응적발사례 등





Let's Study Together



해상사고 시 국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이때~!!

공해상(High seas) 해양오염사고 시 How To Do 방제??

관련 협약 및 관련 법

- **공해개입협약(INTERVENTION 69, PROTOCOL 73) 유류 및 유해화학물질 오염사고 시 공해상 개입에 관한 협약**
☞ 한국 미가입 : 가입 효과분석 용역 수행결과 효용성 낮음 (2015년 「협약 가입 효과분석」 용역 수행)
- **유엔해양법협약(UNCLOS) 제14장 해양환경의 보호와 발전 (발효 '94년, 국내수용 '96년)**
☞ 제217조(기국에 의한 법령집행), 제218조(기항국), 제220조(연안국), 제221조(해난사고에 의한 오염방지)
- **OPRC / OPRC-HNS : 기름 및 HNS 대비·대응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 (국내 '00년 / '08년)**
☞ 대형 기름 및 HNS 해양오염사고 시 재난적 사고확산에 대비하여 국제해사기구(IMO)에 의해 채택된 국가 간 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 (가입조건 ① NCP수립, ② 방제책임기관지정, ③ 국제협력, ④ SOPEP 등)
- **NOWPAP MERRAC : 한·중·일·러 간 해양오염 대비 대응에 관한 사업**
☞ NOWPAP 지역 긴급방제계획 수립, 국가 방제책임기관 간 회의, 합동 방제훈련 실시 등
- **해양환경관리법 :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규정 (관할 : EEZ 안쪽, 영해)**
☞ 제61조 (국가긴급계획의 수립·시행), 제63조 (신고의 의무), 제64조 (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) 제65조 (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등) 등

국제협약 상 『공해』란??

- ▶ 공해(High seas)라 함은 어느 특정 국가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해역, 즉 내수 영해, 배타적 경제 수역, 또는 군도수역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해역을 말한다.
- 우리나라 주변해역은 영해(12해리) 및 접속수역(24해리)만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며, 200해리 이내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표시하는 외측한계선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. 배타적 경제 수역과 공해의 존재가 명확하지 않음.
- 향후 주변국가와 해양경계획정이 이루어졌을 경우, 국제협약상 공해 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.
현재 미 획정구역(중첩수역)을 「공해」 해역으로 인식~!!
- ☞ 미 해양경계획정 구역의 해양오염사고 시 유엔해양법협약(UNCLOS) 및 관련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조치 및 방제를 이행하고 있음.

유엔해양법협약 (UNCLOS) 『제14장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』

- ▶ **제217조 기국(flag States)에 의한 법령집행**
- 제4항 : ~~기국은 위반발생장소나 이러한 위반으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거나 발견된 장소에 관계없이 주장된 위반에 관하여 신속히 조사하고 적절한 경우 소송을 제기한다.
- ▶ **제218조 기항국(Port States)에 의한 법령집행**
- 제1항 : 선박이 어느 국가의 항구나 연안정박시설에 자발적으로 들어온 경우 그 국가는 ~~~ 그 선박으로부터의 배출에 관하여 조사를 행하고 증거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- ▶ **제220조 연안국(Costal States)에 의한 법령집행**
- 제3항 : ~~~ 그 국가의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믿을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, ~~~ 위반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그 밖의 관련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.
- ▶ **제221조 해난사고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**
- 제1항 : ~~~실제상의 피해 또는 발생할 위험이 있는 피해에 상응하는 조치를 영해 밖까지 취하고 집행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.

유엔해양법협약은 모든 해양환경문제에 대한 각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국제적인 차원에서 정립한 국제협약입니다!!

해양오염사고 시에는 기국, 기항국(항만국), 연안국의 법령집행 및 권한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요~!!

관련 법안을 확인해주시고 해양오염방제 및 오염조사의 측면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~!! (다음 호에~!!)

TO BE CONTINUED